

“文 대통령 경제인식 수준 심각”

유성엽, 최고위원회의서 '경제라인 전격 교체' 촉구 소득주도성장 폐기도 주장



유 의원은 “지난 토요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축사를 통해 대통령께서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으며, 취업자 수와 고용률 등 각종 지표가 개선되었다고 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취업자 수는 지난달만 해도 8년 6개월 만의 최악의 고용쇼크가 나타났고, 고용률은 오히려 전년 동월 대비 0.2% 하락했다’고 잘못된

사실관계를 지적했다. 또한 “가계소득이 늘었다고 하지만 빈부격차는 역대 최대로 벌어지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은 박근혜정부 평균치보다도 낮게 나오고 있다”며, “경제가 이렇게 최악인데도, 대통령은 잘 되어간다며 우기고 정책실장은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 강화하겠다고 뽐내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취업자 수와 고용률 등 각종 지표가 나아지고 있다는 발언은 사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이 언급한 ‘고용쇼크’와 성장을 저하 뿐 아니라,

정부가 자랑하는 수출조차도 이미 그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올 2월부터는 반도체를 제외하면 마이너스 상태에 들어간 상황이다. 유 의원은 “대통령의 경제인식이 크게 왜곡된 것은 주변에서 눈과 귀를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박근혜에게 ‘심상시’가 있었다면, 현 정부에는 ‘경제 심상시’는 도대체 누구인가”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경제라인의 전면 교체와 소득주도성장의 완전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여야, ‘협치’ 공감했지만 판문점 선언 비준에는 이견

여야는 27일 이달 임시국회와 내달 정기국회에서 협치를 통해 성과를 이루자는 데 공감했지만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공공개발위원회 등을 갖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민생·규제개혁 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 인사말 듣는 이해찬 당대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이해찬 당대표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에 보낸 대표 취임 축하의 난과 인사말을 듣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번 합의한대로 8월 국회를 규제완화와 민생경제를 위한 협치정국으로 만드는 데 힘을 모으자고 했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도 여야 간에 정쟁이 남발하는 것이 아닌 진정 협치를 위해 양보와 소통을 중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처리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이후) 남북 정상회담의 후속적인 뒷받침은 국회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반도 비핵화를 성공시키기 위해 이것(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논의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여야 간 입장차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대화과 소통, 정보 공유를 통해 간극을 좁히는 것이 국회의 역할인 만큼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시스

이해찬, 집권 20년 TF 구성 시동

“경제성장 견인”... 당정청 전원회의는 내달 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경선 공약이었던 20년 연속 집권을 위해 ‘민주당 20년 집권 플랜 TF(특별반)’를 구성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새로운 시작을 앞둔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은 녹록치 않다. 일차적으로 몇가지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생경제연석회의를 가능한 빨리 구성해서 가동하겠다”며 “기업과 노동자,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는 회의를 구성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이어 “당정청 협력을 보다 강화시

키겠다. 모든 현안을 소통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그 과정을 진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를 위해 여야 5당 대표회의를 제안한다”며 “충분히 모든 사항을 가지고 5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20년 집권플랜 TF를 구성해 준비하겠다”며 “현재 상황에 안주하고 않고 혁신과 소통으로 국민의 명령을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당령에 기초한 당직인선을 잘 준비해서 실시하겠다”며 문재인 정부 2년차인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

다. 약속의 무게가 가볍지 않음을 명심하며 민생과 경제를 잘 이루겠다”고 했다.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는 “또 다시 기약 없는 이별을 하게 됐다”며 “향후 중점선언이 이뤄지면 이산가족 상봉을 상시화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새 지도부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이 9월 1일 사실상의 당정청 전원회의를 갖는다. 홍영표 수석대변인은 이해찬 신임 당 대표의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예방 일정 후 기자들과 만나 “9월 1일 모든 의원들이 청와대에 가서 오찬을 하는데 단순 식사가 아니라 의의, 전 국무위, 전 수석이 동석하는 사실상 당정청 전원회의 같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현안 관련 소통이 있는데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면, 원내에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시스

특활비 폐지, 국회의 눈속임?

상임위 업무추진비 증액 추진 국회 “꼼수 아니, 최소한 지원”

국회가 의장단 몫을 제외한 상임위원회 특활비를 폐지한 가운데 각 상임위에 매달 300만원 규모의 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비를 배정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27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특활비가 전액 없어지니까 회의나 정기국회 등에 대응해 쓸 경비가 없어서 추진하게 됐다”며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선 업무추진비가 필요한데 예산(특활비 폐지 전에는 특활비를 업무추진비로 대체해서 썼던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 추진되는 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비는 매월 300만원 규모로 18개 상임위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국회가 특활비 폐지로 인한 부족분을 업무추진비 등으로 충당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때까지 상임위원장에 지급된 특활비가 매달 600만원 규모였으니 갑자기 없어진다면 특활비를 사용했던 부분에 대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활비를 돌려서 쓰는 것처럼 언급되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이전에 상임위원장과 원내대표 명목으로 가는 특활비가 완전히 폐지됐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는 특활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상임위에 배정되는 업무추진비 규모가 크지 않았다”며 “하

지만 특활비로 사용하던 상임위 운영 관련 비용이 줄어들면서 곤란한 상황이어서 최소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규모가 매달 300만원인 것도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봐야 확실해진다 는 것이다. 또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하고 사유도 있어야하기 때문에 과거 특활비처럼 쓸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업무추진비는 단어 그대로 업무를 하는 데 쓰는 비용이다. 사업을 한다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협의 관련 비용이다. 협의 중 식사비용 등 다양한 형태로 쓰인다. 국회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등은 특활비처럼 누구에게 미리 주거나 하지 않는다. 한도가 있는 법안카드가 지급되고 사용된 뒤에는 어디에 어떤 사유로 썼는지 결재시스템에 올리게 돼있다. 이 내용은 회계담당자나 예산담당, 감사원,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도 다 볼 수 있다”며 투명성을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민주당 의원은 최근 상임위에 배정되는 업무추진비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업무추진비는 미리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한도를 정해 배정되는 것이다. 책정을 할 뿐이기 때문에 쓰고 안 쓰고는 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예산과 똑같이 쓰게 되면 증빙하면 되고 쓰지 않으면 불용 처리된다. 또 업무추진비는 예산집행 지침에 맞는 성격의 것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시스

국민연금기금 고갈 2057년... 해결책 제시

김광수, 국가 지급보장법 발의 “공무원연금처럼 명문화해야”

최근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 기금고갈시기가 기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앞당겨지는 것으로 분석되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신뢰 회복과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공무원연금과같이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당)은 27일, 국민연금에 대하여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할 책임을 법에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민연금사업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실제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지만, 동법 제3조에서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을 뿐, 국가지급을 명시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김광수 의원은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관련 불법적인 개입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했다”고 밝히며 “특히, 공무원연금은 국가지급으로 명문화 되어 있으면서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주저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www.firefly.or.kr

제22회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

무주 반딧불축제

The 22nd Muju Firefly Festival

2018. 9.1 (토) ~ 9.9 (일)

무주군일원 남대천, 지남공원 반딧불전통공예문화촌 등

• 주최, 무주군 • 주관,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45 • 문의, 063)320-5004-17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환경부 • 전라북도 • 한국관광공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